

전자정부 성과 보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거듭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은 몇 분이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전자정부를 만들어 낸 주역들입니다. 저는 전자정부 성과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에게 목례, 일동 박수)

전자정부가 세계 5위... 뭐 어쨌든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의 1위가 되도록 여러분 한 번 더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못할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IT산업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T산업이 이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 성공의 주역은 우리나라 디지털 세력

전자정부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누가 주역일까... 대체로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문민정부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참여정부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부가 다 했다, 그 중에 어느 정부가 많이 했을까, 저는 이런 접근법은 정말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디지털 파워’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 세력이 존재하고, 학문적 세력이 존재하고, 그것이 정치적 세력으로 사실상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산업에 지장이 되는 어떤 정책도 정부도 만들 수 없고, 국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를 뒤로 돌리려는 어떤 정책도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박차를 가하느냐 가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IT산업과 전자정부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세력, 디지털 경제세력, 디지털 정치세력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스스로 자축하는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일동 박수)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무슨 마이콤, 패미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보다 한참 뒤에 와서 제가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하면서 거기에 LAN설비, 말하자면 개별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컴퓨터의 정보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소위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랜 설비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여전히 보니까 세운상가에 가서 기기를 구매하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의 디지털산업에 초석을 연 사람들이 학교에서 먼저 공부하신 분들과 산업현장에서 세운상가에서 구멍가게 열어놓고 애플 갖다 놓고 그거 우리 한글에 맞게 변환시켜 가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공급하던 그 구멍가게 하던 사람들이 오늘 IT산업을 앞장서 이끌었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분들이 그 뒤에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큰 성공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노력, 또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또 그분들이 도제 양성처럼 해 왔던 인재양성이 오늘날 우리 IT산업, IT경제를 이만큼 끌어가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전자정부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IT기술과 학문, 경제 기반 위에서 전자정부 로드맵 구축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군에서, 교도소에서, 또 농촌에서 컴퓨터를 가르친다, 인터넷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소위 정보화 시대에 정보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생각해서 그런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초등학교에 고속통신망, 초고속통신망을 깔다고 했을 때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앞서가는 것이 좋다….

제가 참여정부 막 시작할 때 손정의라는 분이 청와대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브로드밴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 단계를 넘어선 것이지요. 국민의 정부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했던 얘기가 ‘이제는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실업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해서 엉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많은 공공정보,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국가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기반 정보들, 이런 콘텐츠를 구축해 가는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저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서 이제 전자정부, 아주 종합적인 전자정부 로드맵을 만들자 해서 2003년 8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다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먼저 이루어 놓은 IT기술과 학문과 경제의 기반 위에서 우리 정부가 별로 늦지 않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참여정부, 행정시스템과 행정마인드 전자정부에 맞게 혁신

보통 경제는 일류, 행정은 3류 또는 4류, 이런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심지어 앨빈 토플러 같은 사람이 써 놓은 책에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전자정부 수준에 있어서는 그래도 행정도 2류가 아니지요, 일류수준이지요. 우리 경제도 이제 세계 일류수준으로 문턱을 들어서고 있고, 과학기술이 이미 대체로 6위권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곧 뒤따라가는 건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자정부 수준은, 적어도 전자정부에 있어서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뭐 했냐? 행정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전자정부 통합 계획을 세웠고, 행정 시스템과 행정의 마인드를 전체적으로 전자정부에 맞게 뜯어고쳤습니다.

전자정부, 그 IT기술 수준이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 되냐, 이거 되냐, 이런 기능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IT기술이 어떤 것은 툴(tool)이 좀 비싸고 해서 외국산 툴을 쓰고 해서 좀 비싸긴 한데,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 IT기술만으로 전자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분 부분 부처들에 있어서는 독립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이제 상당 수

준 이미 시작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의 통합적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자면 결국 그것은 행정시스템을 전자정부에 맞추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전자정부에 맞추어야 됩니다.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를 위해서 장·차관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들과 여러 차례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밀고 갔습니다.

전자정부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정보통합 수준 들어서

대개 그런 것이 참여정부가 한 것이라고 보면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전자정부 5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정보통합 수준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자부장관이 소개했던, 소위 민원서류 한 장만 내면 나머지 모든 정보는 정부의 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해서 정부가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것이 초보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정보 통합시스템...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정보 통합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 부처에서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에 관한 기초데이터가 법원 다르고, 행자부 다르고, 국세청 다르고, 건교부 다르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자적으로 일치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실제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데 지난 5년간을 꼬박 소비하고도 아직 완성을 못 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선 부처가 게을리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농업부문 정보에 있어서도 기초통계가 충분치 못해서 우리가 농업 소득 직불이라든지 이런 행정에 있어서 자꾸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신문에 가끔

마치 공무원들이 바보노릇 한 것처럼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데이터의 기본을 다시 정비하고 이것을 부처 간 통합해 가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행정 일반에서 문제가 있듯이, 부처 간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처의 정보를 타 부처에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정보나 조세정보나 이런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주 민감한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계, 가공 통계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관한 정보, 수사에 관한 정보, 말하자면 형사사법에 관한 정보라도 어떤 개인의 정보를 개인정보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고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통계로 전부 가공하라는 것이지요. 뭐 가공해서 그것을 공유하는 기반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남은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이 과제

조금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지금은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행정정보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나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는 비교적 잘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행정 감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보는 비교적 잘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 개인이거나 또는 영세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보 접근은, 정보는 다 공개돼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음식점 사이트로 들어가면 음식점에 관련된 각 부처의 모든 정보, 거기에는 중소기업

업청에서 제공하는 그 지역의 상권 정보에서부터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 정보에 이르기까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 중심으로 지금 전부 정보 체계를 다시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자정부의 최고 수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자기의 지위나 자기가 현재 필요로 하는 정보를 키워드로 입력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이런 것이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장애 없이, 내년도 예산까지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내년쯤 가면 거의 골격은 완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를 짧게 받았습시다만, 토론 없이 받았습시다만, 전부 영상으로 보고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가 종이로 보고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쌀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전달하고 전체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좀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왜 굳이 정부에서 이런 영상보고를 하느냐?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기술을 축적하고 더 높은 단계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시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보고라든지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수주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의 구매에 있어서 정부가 정부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시장을 형성하는 데 최대한 지원하자, 이것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산업이면서 IT산업에 대한 조그만 배려라고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당장에 정부 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보호의 문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보호의 문제입니다. 개인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만 집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영업 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집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몇시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언제 타고 어느 슈퍼마켓에 가서 무슨 물건을 구매했는지... 정부에 집적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보 보호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다, 관리를 책임 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 부분은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나이스’ ‘네이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협한 것이, 학생들의 생활기록 정보를 각 학교별로 분리해서 저장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력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그것을 빠트렸는지, 아니면 그것조차 원하지 않았는지, 어쨌든 사기업의, 학원의 프로그램을 빌려다가 그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터져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그 데이터를 관리해 왔더라면, 오히려 정보보호에 유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정부는 그만큼 데이터를 보안 관리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는 것은 대체로 아직 중앙정부 기관에서도 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 기관이 아니라 지방정부 또는 작은 규모의 행정조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보 보호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지난날처럼 무조건 정보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모으되 법적으로 확실하게 규제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그 반대의 길은 아마 19세기의 ‘러다이트 운동’ 과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T가 그렇게, 전자정부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왜 자꾸 느냐? 어제 제가 (국무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두 가지를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아, 저기도 사람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 서비스를 향상시키면 향상시키는 만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IT기술 때문에 줄어드는 곳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서비스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은 필요한 곳이 생기지요.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대응, 세계가 배워가는 모범적 시스템

문제는 서비스의 품질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자꾸만 사람숫자만 가지고 생각하고, 사람숫자 늘어난다고 IT정부 성공 못 했다, 이런 관념은 맞지 않습니다. 영양사가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양호교사가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책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고라는 것이지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일이라면 대강 아무렇게나 신분을 줘도 되지만, 수준 높고 품질 있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은 신분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몇 가지 체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각 부처의 보안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전체 사이버 테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한 한 역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커를 다 못 막느냐? 그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마 최고 수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기관이 역시 세계 여러 나라가 와서 배워가고, 배우고자 하는 모범적인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디지털 세력은 중요한 정치세력

세계화 시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 세력은 분명히 중요한 그 사회의 하나의 정치세력입니다. 단지 디지털산업뿐만이 아니라, 투명한 사회를 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모든 일이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그때그때 여러 사람의 각자의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잘 정비된 사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개인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창의력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성공하고 또한 국가가 안정되고 효율성이 높은 국가로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저는 디지털 세력의 정치적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IT산업에 대해서도 미래를 내다보시고, 디지털 정부에 대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가신다면, 한국이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힘으로 이것을 받쳐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라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서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할 일 하고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